

공식행사
전체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 발제문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짧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인식·감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이들 사이에서 권리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빈곤/poverty’ 단어를 검색하면 대개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별거벗고 깡마른 체구의 아이 이미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빈곤은 아이들의 몸뚱이를 클로즈업한 스냅샷이나 아프리카 인구 5명 중 1명이 기아로 고통받는다든 식의 숫자로 전시되지만, 사실 빈곤은 부단한 과정이고 고된 분투에 가깝습니다. 제가 만난 빈자들은 권리라는 용어 자체를 낯설어하고, 권리를 내세울 엄두를 못 내고, 분노를 삭이고, 못 배웠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마음이 태생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력적인 가정과 거리를 오가면서, 요양병원, 쉼터, 감옥 등 가난한 사람들을 가두고 통제하는 데 급급한 시설을 전전하면서, 묻고 따질 자격을 박탈당한 경험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누적된 결과입니다.

권리 의식의 부재 또는 마모(磨耗)는 한 개인의 누적된 역사뿐 아니라 그가 속한 빈곤 레짐(regime)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도, 법규, 지식, 기술 등 일련의 장치들이 행위자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특정한 주체성(subjectivity)이 형성되는 장을 레짐으로 본다면, 빈곤에 대한 인식과 감각의 형성도, 빈곤 경험의 재현과 빈곤 문제의 공론화도 모두 한 시대의 빈곤 레짐과 관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공론장에서 빈곤 의제는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범람하고 있습니다. 빈곤 레짐의 참여자도 다양해지고, 이들 간의 얽힘도 복잡해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듯 새로운 빈곤 정책을 내놓습니다. 기업은 ‘사회공헌’, ‘사회혁신’, ‘CSR/ESG’ 등 의제를 선도하면서 (빈곤의 ‘원인’이 아니라) 빈곤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포럼처럼, 정부·기업·대학·언론·시민단체 인사들이 웅장한 홀에 한데 모여 빈곤과 불평등을 논하는 글로벌 컨퍼런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풍경은 제가 연구를 시작한 20여 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정 가격의 공공주택은 여전히 부족하고,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는 이전보다 인상되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연명뿐인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맞은편에 자리한 동자동 쪽방촌은 빈곤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찾아오는 수많은 행위자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정책과 제도를 바꿔내기 위해 싸워온 소수 활동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쪽방 주민들을 자신과 동등한 권리, 자격, 열망을 가진 인간으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복지 종사자는 ‘의존성’을 감시하고 부정 수급을 심판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주민 행사에 인사차 방문하면서도 행여 소란이 벌어질까 안절부절못합니다. 명절마다 보급 물품을 신고 찾아오는 후원인들은 증명사진을 찍느라 분주하고, 쪽방촌에 우후죽순 들어선 교회는 주민 개인의 참회와 구원을 설교하는 데 정성을 쏟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같

곳 없는 주민들의 처지를 악용해 비싼 임대료를 물리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중간 관리인을 고용해 직접적인 마주침을 회피합니다.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누적된 삶을 살다 쪽방촌이라는 ‘최후의 피난처’에 당도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시선과 마주하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주민들은 무료급식을 타기 위해, 후원인이 나눠주는 물품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섭니다. 대부분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무엇보다 육체적 고통입니다. 무심히 지나치거나 얼굴을 붉히는 시민을 통해, 함께 줄을 선 허름한 이웃을 통해 제 비참을 거듭 확인하는 수치스러운 의례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값기를 바라지 않는 선물(gift)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교회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 정부는 쪽방 주민을 지원, 보호, 배려하는 단기 정책을 양산합니다. ‘권리’의 언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놓고 ‘약자’라고 부릅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과 ‘약자 복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파업하는 노동자와 쪽방에서 고립된 수급자를 분리하고, 후자 중에도 권리를 외치기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을 ‘약자’로 호명합니다. 이런 연결망을 감내한 채, 때로 익숙해진 채 살아온 사람들에게 ‘권리’란 어떤 의미인지, 대체 의미가 있거나 할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빈곤 문제를 이해하려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너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 책 『빈곤 과정』(2023)에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어떤 빈곤을 어떤 방식으로 쟁점화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동자동의 주민자치조직인 ‘동자동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는 한국 도시 빈민운동에서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는 공동체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살면서 자원과 기회의 제약을 통감해 온 가난한 사람들이 혈연가족을 넘어 ‘돌봄 네트워크로서의 집’을 힘겹게 만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소유주들의 반발로 2년 넘게 보류 중인 쪽방촌 공공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부단히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도시’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연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공의료, 공교육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할 때, 시민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당연시할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약자’로 타자화하기를 멈출 때, 더 나아가 우리의 편리와 욕망이 빈곤을 온존한다는 불편한 사실과 용기 있게 대면할 때 ‘인권’이란 단어는 저절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